
서평

혼자만이 아니고 복잡했던 투쟁의 길
—이갑용, 『길은 복잡하지 않다』, 철수와영희, 2009

이갑용, 『길은 복잡하지 않다』, 철수와영희, 2009

김영수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문을 열어젖히고,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사수하면서 대중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던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매서운 바닷바람과 싸우면서 현대그룹의 자본에게 황금알을 바쳐야만 했던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현대그룹의 인명경시, 비인격적 대우, 최고의 대형산재율, 최장시간 노동, 저임금 위해작업장, 거둬되는 대량인원감축 등 가히 살인적 조건에서 현대 그룹의 자본을 위해 몸을 바쳐야만 했었다. 대표적인 사업장이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의 대조립공장 벽에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고 박혀 있었듯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의 희생양으로 살다가 1987년 7월을 맞이하여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단연 1987년 7~9월의 현대노동자 투쟁, 1988~1989년에 걸쳐서 전개된 128일 파업투쟁, 그리고 전국 총파업 선언을 몰고 온 1990년 4월과

1994년 6월의 현대중공업 폴리앗투쟁 등이다.

이러한 투쟁들은 1980~1990년대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 한복판에 『길은 복잡하지 않다』를 저술한 저자가 서 있었다. 저자는 자신을 ‘독고다이’로 표현하면서,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그 혼한 학습 한 번 해보지 않고 오로지 투쟁의 원칙만을 믿었다고 한다. 스스로 원칙주의자라고 믿는 저자는 투쟁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 여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참으로 복잡하고 험난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삶의 여정을 회고하면서도,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서 우리나라오는 웅숭깊은 마음을 담아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제까지 아주 질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책의 제목처럼 그 대안과 희망을 복잡하지 않게 그려주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은 혼자만이 아니었던 투쟁의 길이었고, 아주 복잡하고 험난한 투쟁의 길이였다.

1. 복잡하고 험난했던 투쟁의 여정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운동은 투쟁의 역사와 배신의 역사를 동시에 쓰고 있다. 어용노조의 출범(1987.7.21)과 직권조인(1988.4.19, 1992.9.18)이 노동자 위에 군림했던 노동조합의 역사였다면, 1987년 7월의 11인 민주노조 대책위원회 주도하에 전개되었던 56일 파업을 시작으로 1994년의 폴리앗 투쟁과 LNG선상 68일 파업에 이르렀던 투쟁은 노동자들과 함께 했던 노동조합의 역사였다.

이러한 역사의 한복판에 노동조합의 수많은 임원 및 간부들이 존재했고, 저자도 19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열풍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초대 대의원이 된다. 관리자로부터 찍히거나 그들에게 입바른 소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자체부터가 험난한 길이었지만, 또 한 번의 대의원을 거치고 운영위원 그리고 교섭위원으로 노동조합의 간부체계를 순서대로 밟았다. 이 과정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저자는 대의원 및 교섭위원들에 대한 회사의 포섭작전과 물량공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살포시 드러내면서도, 자본의 “유구한 이념 공세(좌경용공인 불순한 외부세력),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정리해고, 승진과 전직, 인사권과 뇌물, 각종 유혹, 직권조인, 개별적 포섭 및 테러 등 자본의 개별적 포섭 및 물량공세”(309-344쪽) 등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원칙을 포기해야만 했던 구체적 사실들을 많이 밝히고 있다. 저자는 건강한 대의원과 조합원이라는 백에 의존하면 투쟁의 길은 복잡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그러한 공세로부터 자유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1987년 처음 투쟁이 시작되었을 때, 조합원들의 요구는 두발 자유화, 복장 자유화, 그리고 임금인상, 차등지급 철폐, 폭력 금지 등으로 이어졌다. 저자의 평가대로, 조합원들이 인간적 대우를 받고자 했던 삶의 민주화 과정이었다. 1980년 3월에서 5월경, 고등학생들이 두발과 복장의 자유화 및 폭력 금지 등을 외치면서 학내 시위를 시도했던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은 전근대적인 병영적 노무관리체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숨 쉬면서 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삶의 민주화를 기업 안의 개인적인 문제로 가두었다. 조합원들은 자신과 관리자의 관계가 보다 인간적인 차원으로 변하게 되자, 경제적인 이해에 집중하게 되었다. 임금인상, 각종의 수당 신설 및 인상, 상여금 인상 등의 문제가 투쟁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조합의 간부와 임원들도 조합원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128일 파업투쟁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국가·자본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국가와 자본은 1988년 1월 8일의 백색테러, 2월 21일의 식칼테러, 이북 출신 자녀들의 모임인 반공청년회를 통해 구사대 조직화 등으로 탄압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울산 30’이라는 작전명으로 2만 명을 투입하였다. 비록 경찰의 진압작전은 노동자 1명과 정문에서 경찰 병력 투입을 항

의하던 외부인 몇 명의 검거로 끝났고, 노동자들은 오히려 오좌불 속소로 옮겨 동구를 제2의 광주로 만드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실질적인 원인은 바로 경제적인 이해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1988년 6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무려 6개월 동안 88차의 협상을 통해 총 136개 조항 중에서 132개 조항에 합의하고 4개의 핵심조항을 남겨 놓고 있었다. 첫째, 주 44시간 근로(토요일 오전 근무), 둘째, 제 수당의 신설 및 인상, 셋째, 상여금 현행 500%에서 600%로 인상, 넷째, 퇴직금 누진제 실시 등이었다.

그런데 저자는 교섭과정에서 서태수 집행부가 교섭과정에서 회사의 사주를 받아 정상조업을 외치고 직권 조인으로 조합원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를 징계하고 고소·고발로 뒤통수를 쳤던 점, 그리고 교섭안을 줄여가며 마무리하려고 조합원 총회를 강행해서 파업 찬반투표를 하지만 결과가 오히려 파업찬성으로 나온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128일 파업투쟁의 실질적 원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이전의 노동착취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이후에도 경제적 조합주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오히려 현대그룹이나 기업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 두 기업의 최고 이데올로기가 횡행하였다. 하나는 삼성 제일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현대이즘이었다. 이 두 그룹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최고인 것처럼 유포되었다. 자본이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것이지만, 노동자들도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하청회사의 비정규 노동자들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현대이즘(Hyundaisism)’에 자긍심을 느끼면서 술집과 거리를 활보하였다. 현대중공업 마크가 붙어 있는 작업복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울산 지역의 최고 노동자임을 상징하는 그 자체

였다. 그리고 강제성을 띠었던 자발적이었던, 1992년 대선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현대그룹 소속의 조합원들은 국민당에 입당하였는데, 그 비율이 80~90%에 이르렀다. 현대그룹 측이 유포한 현대위기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쉽게 먹혀들어갔으며, 국민당이 무너지면 현대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노동조합과 재벌의 구분을 흐리게 만들기도 하였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바로 이런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해야만 했다. 노동조합의 지도부들은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굴종하곤 했다. 돈의 '두려움에 중독' 된 조합원들은 삶의 민주화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의 길은 아주 복잡했다. 조합원의 요구는 말 그대로 정치적 투쟁의 짐을 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만의 노동조합운동리그는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으로 열렸다.

현대그룹의 노동조합 지도부나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요구라고 하면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던 것이다. 1990년대 초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투쟁이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유지했었던 역사적 측면을 고려하면, 저자는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평가했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는 산별노조로 편재된 금속노조의 암 덩어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해고자들조차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에게 최대한 예우를 지키면서 투쟁하곤 했다. 1988년 벽두, 현대중공업의 해고자들은 원직 복직을 위해 서울 계동의 본사 앞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1988년 1월 16일, 상경하여 투쟁하던 노동자들은 출근하는 정주영을 보고, 현대그룹 회장님에 대한 예우를 지키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요청한다. “회장님, 복직 좀 시켜주십시오.” 이러한 현상은 투쟁전술의 일환이자 투쟁의 정당성을 여론화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현대이즘의 일환, 즉 현대그룹의 총수를 투쟁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못했던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128일 동안의 장기파업에서도 단결력을 잃지 않았다. 당시 파업지도부의 대표였던 이원건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첫째, 조합원 자신이 자신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스스로 뭉쳤다고 봅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노동자가 믿는 것이라면 단결력밖에 더 있었습니까? 둘째로 지도자의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거짓 없는 진실, 두려움 없이 앞장서는 지도자의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노동자 1989, 106-107) 그러나 이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이지만, 현해협을 지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또한 해고노동자, 학생운동 출신의 노동운동가, 해직교사 등 소수의 사람들이 화려한 현대그룹 노동조합운동의 이면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들은 바로 회사에서 말하는 외부불순세력들이었다. 저자가 책에서 그토록 비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파주의 운동의 주체들이었다.

2. 불순한 정파주의 운동과 건강한 정파운동

저자는 책의 많은 곳에서 정파주의를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등장한 ‘일어나라 코리아!’ 진영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구조(169쪽),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알게 된 기성 정치관 못지않은 운동관의 학연, 지연, 정파, 서울 중심주의뿐만 아니라 후보군을 폄평하는 운동권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굴러가는 복잡한 조직의 구조(175쪽), 심지어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금속연맹의 위원장, 사무처장, 공공연맹 위원장, 그리고 사회보험 노조 위원장께서 현실적으로 대오를 이끌기 어려우니 민주노총이 투쟁을 정리하라고 정중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구조(199-201쪽) 등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결론은 ‘이영순과 김창현의 도덕성 문제, 반성 없음과 계급의식 부족, 권력 지향 패권주의, 비리 등의 문제로 우파가 더는 민주노총의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351쪽)는 것이었다. 저

자는 ‘계급적 자각과 연대를 통해 계급의식을 방해하는 그릇된 정파의 활동을 몰아내고, 진짜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민주노총을 만들어야 혁신할 수 있다’(361쪽)고 강조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우파들이 아니 이 책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서 정파 논쟁에 불을 붙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파 논쟁이야말로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건강한 대의원과 조합원을 믿으면서 투쟁의 원칙을 고수했듯이, 건강한 정파운동과 불순한 정파주의 운동을 철저히 분별해야만 했었다. 건강하지 못한 정파주의는 계급적 당파성을 저버리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으면서 정파세력만의 권력지향적인 말과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파운동은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 학생운동은 1980년대 초반에 노동계급 중심의 주체역량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현장에 대대적으로 진출하였다. 학생운동 출신과 일부 선진노동자들은 노동조합운동의 다양한 소그룹들을 만드는 주체들이었다. 당시 현장으로 침투하려는 학생운동의 활동가들은 장기간 현장투신을 위해 준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식화의 교육매체 선전 및 학습, 의식화 진술, 현장 활동가로서의 품성, 소그룹 형성론, 외부세력과의 연계구조 형성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였다.

학생운동의 활동가들은 이 과정에서 학생운동의 ‘학맥, 인맥, 정파맥’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에 노동현장에 참여했던 한 활동가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선언이 다른 활동가들이 동일한 단위 사업장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활동가들은 서로 모르는 채 생활해야만 했고, 오히려 단위 사업장의 노동조합운동과 관련된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곤 했다. 경쟁적 관계가 심할 경우에, 노동조합운동의 분열이 강화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하였다.”

당시 노동현장으로 침투하려 했던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을 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자파세력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위장취업의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

히 조직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파운동은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울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파운동 덕택에 노동운동이 발전했다. 정파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및 민주노총 건설투쟁의 밑거름이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들을 양성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및 진보적 노동조합주의를 지향하는 이론은 이미 1990년 중반부터 전노협 위기론을 디밀며 고개를 들었고, 이후 전노협 청산운동의 계기로 작용했다.

각 정파운동의 주체들은 그러한 이론을 수용하느냐 비판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논쟁을 전개했다. 이미 민주노조운동의 우파, 중앙파, 그리고 현장파의 씨앗이 뿌려졌거나 이미 발아된 상태였으며, 각각의 정파들은 특히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발전전략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러한 논쟁의 주변부에 자리 잡은 상태에서 논쟁의 중심부로 들어오지 않았다.

민주노조운동에서 투쟁의 선봉장이자 계급적 투쟁전선의 속죄양인 것처럼 말했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발전전략을 우회하면서 존재하였다. 정파운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보다 총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파운동의 역사가 저자처럼 말이나 이론이 아닌 '투쟁'으로만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대전교도소에는 학생운동 출신들이 많았다. 시간도 많으니 밖에서 궁금하던 NL(민족해방계열)과 PD(민중민주계열)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NL출신들과 NL에 대한 공부를, PD출신들과 PD에 대한 공부를 한 달 정도 했다. 노동운동을 한 내 경험을 중심으로 토론도 하고 서로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차이가 있고 서로 벽도 높지만, 투쟁을 해야 하는 것에 동의가 되고, 목표와 지향은 달라도 대중을 상대로 운동하는 것도 같았다. 결론은, PD건 NL이건 말이 아닌 투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운동가

라는 거였다.”(126쪽) 저자가 정파주의 운동과 정파운동을 혼동하거나 아니면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노동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혼한 학습 한 번 해보지 않았고, 그런 제안도 모두 거절했다. 학생운동 출신들이 노동운동을 가르친다며 하는 말과 행동들이 무척 거슬렸고,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일하지 않았다. 시쳇말로 ‘독고다이’ 기질이라고 할까. 그들이 가진 노동자에 대한 우월감이 싫었고, 대학을 다니지 못한 죄로 그들을 무조건 경외하는 노동자들의 비굴함도 싫었다. … 이 책 안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민주노총 안의 보이지 않는 숨은 관료 권력들을 정리해야 조직이 산다. 그들이 저지른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346-347쪽)

저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불순한 정파주의 운동은 노동운동의 발전에 해악을 끼쳤다. 맞는 말이다. 예를 들면, 소위 국민파는 민주노총 내에서 양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어서 대의원들만의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나 공약이 필요 없다. 자신의 정파에 소속되어 있는 대의원만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정파의 결정에 따라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불순한 정파주의의 주체인가 아니면 대상인가? 저자는 책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정파주의의 주체이고, 대의원들은 마치 정파주의의 대상인 것처럼 강조한다. 대의원들이 노동운동 진영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움직인다면 맞는 말이다.

허나 대의원들은 민주노총 산하 사업의 간부를 하면서 참으로 영특하게 변했다. 그들 스스로 투쟁을 회피하는 간부로, 조직권력에 안주하는 간부로, 그리고 계급적 전망을 방치한 상태에서 오로지 기업의 이해만을 생각하는 간부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들은 이미 정파운동을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불순한 정파주의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존재한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의 노동조합 간부나 지도부들이 바로 그 핵심적 주체 중 하나이다.

“1996년~1997년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단행되었다. 이 파업투쟁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 지금은 노동운동진영에서도 대기업 노조를 이기주의로 비판하지만, 전국 총파업 국면에서 가장 잘 조직되어 있고 일사불란한 행동이 가능한 곳은 대기업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으로서는 대기업 노조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투쟁에 참여하는가가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다. 1997년 1월 15일,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면파업에서 수요파업으로 전환했다. 각종의 투쟁에서 대기업 노조들은 파업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민주노총이라는 중앙조직이 파업의 수위를 낮추고 후퇴한 것은 뼈아픈 실수이다.”(166쪽)

또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정파운동이 정착되어야 한다. 먼저 논쟁과 토론이 공개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음모적이면서도 비밀리에 추진되는 정파주의적 토론이 지양되어야 한다. 둘째, 논쟁과 토론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논쟁과 토론의 과정에서 비판은 있는데, 그 성과는 온데간데없다. 토론회는 그저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거나 결정의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치부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최악의 논쟁과 토론만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각종의 사업과 투쟁에 대한 조직적인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가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건강한 정파운동은 함께 투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파운동을 배격하는 순간,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조합주의나 노동자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지역 노동자들을 투쟁하거나 조직하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충북 본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형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충북 지역의 경우, 계파 간의 아니 정파 간의 갈등이 좀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지역의 경우, 정파 간의 갈등이 크다. 이에 비해 충북본부는 갈등이 적다. 충북본부는 나름대로 지역사업을 열심히 한 성과라고 본다.”(이정훈,

3. 계급적인 노동자다움

저자는 다양한 권력을 경험하였다. 노동조합이라는 대중권력, 울산 동구청장이라는 지방행정권력, 그리고 정당의 권력 등이 그것이다. 이런 권력의 자리를 바라는 사람이 많겠지만, 저자처럼 소신과 원칙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나 주어질 것이다. 특히 저자가 설정하고 실천했던 노동자다운 지방행정권력의 원칙들, 특히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많은 정책들은 사람들이 배우고 실천해야만 할 것들이다.

“나는 취임하면서 노동자 정치와 노동자 행정을 하겠다고 했다. 노동자 정치와 노동자 행정이 무엇인지 사실 명확한 상은 없었다. 노동운동을 해온 것처럼, 노동자의 의식만 잃지 않는다면 두려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선물에 대한 원칙, 다면평가제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려 했던 인사의 원칙, 생활이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채용하고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했던 비정규직 인사 원칙,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실현하고자 했던 주민참여 예산제, 생계비 이외에 기부하고 기탁했던 월급에 대한 원칙, 투명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사용했던 관공비, 어쩔 수 없이 위탁해야만 할 사업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 여부를 선정기준에 넣는 것 혹은 노동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 등.”(252-276쪽)

이러한 원칙은 참으로 노동자답고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것들이자, 권력을 소유하기보다 권력을 함께 공유하려는 새로운 세상의 몸짓이었다. 자본주의 권력구조에 흠집도 내지 못하고 점 하나 제대로 찍지 못한 경우이지만, 저자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려 했다.

그러나 권력의 구조적 특성상, 권력의 수장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이다. 지방자치의 권력도 전체 자본주의 권력구조에 조응해서 형성되고 재편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점에 대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다.

어디까지가 개인이고 또 어디까지가 조직을 대표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세력이 지방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노동자 계급의 존재조건이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권력의 수장으로서 개인 스스로 이러한 권력의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다. 저자가 구청장직에서 해고(?)된 것도 권력의 구조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권력의 구조 및 헤게모니를 개인주의적이고 순결주의적인 차원에서 비판하고 평가한다. 1999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했다가, 표결까지 가서 상반기 투쟁을 하고 내려가라는 대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임기가 연장되고 나서 우리 마음은 복잡했다. …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우리들의 눈에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야수로 보였다. 이들과 함께 6개월을 더 일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 구조를 6개월 안에 깰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다. 민주노총 안에 굳건히 자리 잡은 권력,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동지들은 이들의 실체를 모르고 오히려 그들의 지시만 따르고 있으니 이 구도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그들이 알아서 노동운동을 떠나 주거나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해안이 생겨 가려진 진실을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막막했다. 어쨌든 알리는 수밖에 없었다.” (221쪽)

저자는 물론 정파주의적인 대의원과 보이지 않은 손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노동현장의 활동가들이나 조합원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권력의 맛을 체득하고 있다. 활동가 조직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권력을 장악하는 조직으로 전략했고, 조합원들은 권력이 없는 노동조합에 기대려 하지 않는다. 회사나 자본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은 곧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들의 권력인 것이다.

이러한 권력이 국가와 자본의 법치를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나는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판사가 2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무슨

죄가 있다고 실형이냐며 고함을 지르고 항의가 터져 나왔다. 1990년대에
는 재판투쟁을 많이 했다. 정권이 권위가 없으니 재판장은 존경도 못 받았
고, 법정 또한 투쟁의 대상이었다. 재판 날 수백 명 참석은 기본이고, 우리
가 들어서면 박수와 환호가 넘쳐 제지할 수도 없었다. 검사나 판사가 헛소
리하면 고무신도 집어던지고 욕설에 고함까지 구호까지 재판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렇게 든든한 동지들이 있으니, 우리도 재판정에 들
어설 때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 퇴진하라고 외치고, 방청석에서는
구속자를 석방하라며 화답했다.”(114쪽)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가 만개한 요즈음, 감히 상상할 수 없
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노동자들은 곧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중권력
을 신뢰하면서 의지했다. 이러한 신뢰가 바로 법정을 해방시키는 투쟁의
동력이었다.

저자의 경력을 고려한다면, 개인주의적인 노동자다움이 아니라 계급적
인 노동자다움을 기억하여 기술했어야 했다. 저자는 “위원장은 노사정위원
회 불참을 주장해도 대의원대회는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하고, 총파업을 선
언하면 위원장에게 철회하라고 조용히 협박하는 식이었다”고 밝히고 있지
만,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저자 역시 노사정위원회나 총파업에서 ‘양치기
소년의 무리’ 입에 틀림없었다.

권력은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다. 책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
듯이, 저자는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면서 다양한 권력의 수장이 되었다.
권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적이고 순결한 차원에서 집행되지 않아
야 한다. 계급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사용되는 것이 권력이다.

저자는 권력의 계급적 본성을 자의적이고 순결주의적인 개인적 노동자
다움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민주
주의 혹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계급적 방안을 도외시하
고 있다. 특히 저자는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연연
중에 자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그저 노동자주의적인 방안을 강

조하면서 자본주의적 성장을 배려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분배를 바꿔야 성장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에 답이 들어 있다. 오로지 성장을 향해서만 달려왔던 것이 오늘 이 상황을 가져왔고, 그 해결책은 분배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며, … 노동자들은 이제 임금착취라는 말의 뜻을 몸소 깨닫게 된 것이다. … 민주주의는 멀리 있지 않았다.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경제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이뤄냈다. 민주노조 운동이 곧 노동운동이었으며 노동운동은 곧 민주화운동이었다. 그들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었다.”(293-308쪽)